



내년 국가예산 확보 '올인' 전략 돌입

전북자치도, 김 지사 주재
국회 단계 국비 점검회의

정부안 과소·미반영된
70대 사업 대응전략 점검

전북특별자치도가 2026년 국가예산 확보를 위한 '올인' 전략에 돌입했다. 도는 16일 도청에서 김관영 지사 주재로 행정·경제부지사, 정무수석, 실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26년 국가예산 국회단계 점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점검회의는 정부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되고 본격적인 상임위 및 예결위 심의가 시작되기 전, 도정 핵심사업에 대한 반영 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 전략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이 자리에서는 정부안 단계에서 과소·미반영된 70대 중점 사업에 대한 국회 단계 증액 추진 상황과 대응 계획이 논의됐다.

도는 국회단계 예산 증액을 위해 서면질의서 작성과 감액 방어자료 마련 등 실무 중심의 대응 사업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휘부가 직접 기재부 및 국회 주요 인사를 만나 증액의 필요성을 설득한다.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과 협력



16일 전북특별자치도청 회의실에서 열린 2026년 국가예산 확보 국회단계 전략회의에 김관영 도지사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강화하는 정치권 공조 체계도 구축한다. 주요 쟁점 사업을 점검하기 위한 전략회의를 정례화하고, 오는 27일부터 국회 본회의 의결 시까지도 및 시군 국회 상주반을 운영해 실시간 심사동향 파악과 즉각 대응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기재부 장관,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심 의관 등과 의 건담회를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이어 예결위 위원장·간사·소위위원, 국회의장, 원내대표 등 핵심 인사와의 면담을 통해 전북 주요 사업의 증액 타당성을 집중 설명한다.

상임위별로는 맞춤형 전략을 병행해 상임위 단계에서 감액 위험을 조기 차단하고, 예결소위 단계에서 증액을 이끌어낸다는 계획이다. 이날 30일에는 지역 및 연고 국회의원 대상 예산정책 협의회를 열고 주요 현안 사업에 대한 지원을 요청하는 등 역대 최대 국가예

산 확보를 위한 원팀 대응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관영 도지사는 "국회단계는 국가예산 확보의 마지막 관문인 만큼, 모든 행정역량을 집중해 도정 핵심사업의 반영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한다"며 "도와 시군, 정치권이 한 몸처럼 움직여 예산 심의의 벽을 넘을 수 있다. 남은 기간 전 조직이 비상 체제로 임해 최선의 성과를 만들어내자"고 당부했다. /이만호 기자

“해경이 5년간 압수한 마약 2.4t 전 국민이 투약하고도 남을 양”

해경 마약수사 전담 인력 26명… 검·경의 10분의 1 수준
윤준병 의원 “단속 인력 강화… 입국 단계부터 봉쇄해야”

최근 5년여간 해양경찰이 압수한 마약류가 2.4톤에 달해, 국민 전체가 투약하고도 남을 양으로 드러났다.



5,100만 명)를 모두 포함하고도 남는다.

2024년 기준 국내 전체 마약류 압수량 1.173kg 중 해경이 압수한 양은 52%(614kg)로, 경찰과 검찰의 합계(48%)를 웃돌았다.

그러나 해경의 마약수사 전담 인력은 단 26명으로, 검찰(318명)이나 경찰(369명)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

윤 의원은 “해상 밀반입은 한 번에 대량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다”며 “단 한 건으로도 수십만 명이 투약할 수 있는 규모인 만큼 해경의 단속 인력과 장비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마약류는 일단 국내에 들어오면 유통 차단이 어렵다”며 “입국 단계에서부터 원천 봉쇄해 대한민국이 다시 마약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입법·정책적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만호 기자·정음=김대환 기자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생태계 조성

도, TIPS 운영사 6곳과 손잡고 64개 기업 육성
작년 도내 틱스 선정기업 2022년 대비 11배 ↑

전북특별자치도는 2025년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선정된 6개 틱스(TIPS) 운영사와 손잡고, 64개 기술창업 기업을 집중 육성한다고 16일 밝혔다.

틱스(TIPS, Tech Incubator Program for Startup)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지정한 투자자가 유망한 창업기업에 먼저 1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정부가 최대 17억원까지 추가로 지원하는 제도다. 기술창업 기업이 초기에 겪는 '데스밸리(성장 정체기)'를 넘기도록 돕는 대표

적인 창업 지원정책이다.

전북은 2022년까지만 해도 틱스운영사가 없어 지역 창업기업이 정부 지원을 받기 어려웠다. 이에 전북자치도는 2023년부터 운영사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지역 유망기업을 발굴해 틱스에 도전하도록 돕는 '민간주도형 기술창업 활성화사업'을 추진해왔다.

그 결과 2023년 20개, 2024년 40개, 2025년 64개 등 틱스도전 기업이 확대와 함께 도내 기술창업기업의 틱스 진출을 적극 뒷받쳤다.

최근 대외경제 불확실성 증가로 투자 리스크가 높은 초기 창업기업에 대한 투자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그간의 성과가 두드러진다.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따르면, 전국 초기단계 벤처투자자금은 2022년 2조500억원에서 2024년 1조2,633억원으로 37% 급감했지만, 도내 틱스선정기업은 같은 기간 27개에서 22개로 11배나 늘었다.

양적 성장과 함께 질적 향상도 눈에 띈다. 2024년 틱스 도전기업으로 육성된 파마로보틱스, 에이티비맵, 지터에

이어어로스페이스, 주미당 등은 틱스뿐만 아니라 디팩 틱스, 초격차 1000+ 사업에도 선정되며 매출과 기술력을 동시에 인정받아 지역 창업생태계의 토대가 되고 있다.

김인태 기업유치지원실장은 “경제적 어려움 속에서도 지역 창업기업들이 혁신 기술로 투자를 유치하며 희망찬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며 “앞으로도 도내 창업기업들이 민간의 전문 역량을 활용해 성장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만호 기자

최근 5년새 미사용 전력량 용량 230배 급증

풍력 등 지연사업 10건 중 8건

최근 5년 사이 발전사업 지연으로 묶인 미사용 전력량 용량이 신규 원전 16기 규모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안호영 위원장(더불어민주당)이 한국전력공사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사업 개시가 늦어진 발전사업은 393건(16,208MW)으로, 2021년 1건에서 2025년 171건으로 급증했다. 이에 따른 미사용 전력량 용량도 39.6MW에서 9,209MW로 늘어, 5년 만에 230배 이상 증가했다.

지연된 사업의 대부분은 재생에너지 분야였다. 에너지원별 미사용 용량은 △풍력 8,474MW(52%) △태양광 3,982MW(25%)로, 두 부문이 전체의 77%를 차지했다. 평균 지연 기간도 풍



력은 약 6년, 태양광은 약 3년으로 나타나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추진 난항이 드러났다.

사업 지연의 원인으로는 주민 수용성 부족, 인허가 절차 지연 등이 꼽혔다.

한전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지난해 하반기부터 '알박기 사업장' 관리기준을 강화하고, 사업 지연으로 묶인 전력량 회수와 재배분을 추진 중이다. 회수된 약 5.0GW 용량은 준비된 신규 사업자에게 단계적으로 재분배될 예정이다. /이만호 기자

토·일요일 신문 쉽다.

한 줄 소식

노태우 비자금에 '1.4조 재산분할' 뒤집혀… 대법, SK그룹 회장 이혼소송 관련 2심 파기환송

생태건강치유도시 진안

쾌적한 생태환경도시, 미래진안 건강도시, 자연치유 녹색도시, 생활 속 행복도시

NAVER 진안군 검색

지역

뉴스

마인

마이산

진안고원
JINAN GOWON